

대테러 인권보호관이 하는 일은?



인권보호 자문 개선사항 권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과 제도에 있어서
인권보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합니다.



인권 침해 관련 민원처리

대테러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민원사건을 처리합니다.



관계기관 인권교육 등 인권보호활동 수행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등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위원장 보고 후 인권침해 시정 권고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이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7층
Tel. 02-739-8177 Fax. 02-739-8180

대테러 인권보호관

인권을 지키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

인권침해시 대응절차 및 처리방법



민원대상

대테러활동 중 기본권이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누구든지 대테러 인권보호관에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테러 활동이란?

- ☑ 테러 관련 정보 수집
- ☑ 테러 위험인물 관리
- ☑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 수단의 안전 관리
- ☑ 인원·시설 장비의 보호
- ☑ 국제 행사 안전 확보
- ☑ 그 밖의 테러위험에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



후속조치

법률구조·고발 등

민원인의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안내·고발이나
수사의뢰·당사자나 책임자에 대한 징계요청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민원접수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에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편 / 방문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7층

전화 / 팩스 Tel. 02-739-8177 Fax. 02-739-8180

이메일 terrorminwon@korea.kr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민원처리

신속처리 및 2개월 이내 결과통지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개월 이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민원인에게 통지합니다.

관계기관에 시정 권고

민원 조사 결과,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는
통합적인 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테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전담조직 구성, 테러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
테러 피해에 대한 지원 등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

테러방지법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을 방지
하기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습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대테러 인권보호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입니다.

